

우리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삼풍의 비극이 지난 6월29일로 1년을 맞았다.

세계적 거대도시인 서울 한복판에서 지은지 6년밖에 안되는 고급백화점이 10초만에 완전히 붕괴되는 경이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사망 5백1명에 부상 9백37명, 추정피해액 4천여억원.

삼풍 그 후 1년... 그리고 건축문화와 의식

1 Year After Sampoong Collapise...
and Then Architectural Culture Consciousness

박서홍 / (주)희산건축사사무소
by Park Suh-Hong

그 다음날부터 정부는 우리 건설산업 전반을 일거에 뜯어고쳐서 당장이라도 유토피아를 만들 것처럼 매일 커다란 조치들을 쏟아냈다.

메스컴들은 또 어땠는가. 침착하고 깊이있는 진단으로 사고발생의 원인이나 배경을 설명해서 향후 대안을 모색하기보다는 전문

성이 결여된 피상적이고 경박한 선정주의 행태로 일관했다.

이로 인해 국민들에게는 심한 자괴감과 피해의식의 확산이 있었을 뿐 좀더 긍정적이고 건전한 의식의 고양은 부족했다.

그 후로 정말 우리사회는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고 발전적으로 변해갈 가능성을 찾았는가, 필자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그런 엄청난 사고를 당했으면 지금쯤 무엇인가 달라졌어야 한다고 기대하는 것은 우리국민들의 건축문화에 대한 의식향상이라고 본다.

삼풍같은 대형 건설사고는 그 사고의 직접적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건축에 대한 문화적 의식이 저급한 수준에 있는 대부분의 국민도 상당부분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의 건축문화의식은 어느정도 달라졌는가. 삼풍사고 이후 정부가 국민들에게 법이나 제도를 고쳐서 우리 건설산업을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고 약속한 방침은 14개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된다.

과연 이것들이 제대로 지켜졌으며 얼마나 내실이 있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정부가 서두른 여러가지 제도적인 노력은 비교적 예전보다는 나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14개의 제도개선 시도중에서 안전관리공단과 재난관리청 신설, 준공 3개월전 예비검사 등 3가지 방침은 워낙 졸속발상인 관계로 검토단계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아 철회됐다.

나머지 9가지의 건축·건설관련 제도개선 방침은 추진상 정도차이는 있지만 실행됐으나, 부실공사 발생의 가장 주범이라고 건설업계가 주장했던 공사비의 적정 반영의 문제는 실적공사비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일단 해결의 실마리를 잡아가고 있고 정부는 이의 시행을

위해 그간의 표준품셈 제도를 없애기도 했다.

또한 정부는 인허가 서류 및 공사현장 건축자재 등에 실명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로는 인허가 서류에만 실명제가 도입됐다.

이밖에 다중이용 시설물의 책임관리제 실시(96년 5월), 정부 발주공사 시공자 건설공사 보험 의무 가입(지난해 7월부터 실시), 민간건축물 3개월마다 안전진단 실시(96년 5월 실시), 인위재난 관리법(지난해 7월 18일 제정), 대형사고 발생시 무기징역까지 처벌강화(지난해 12월 국회 통과), 응급의료체제 강화(지난해부터 실시), 대형공사 적격낙찰제 도입(지난해 7월부터 실시), 건축설계인허가절차 간소화, 내무부 산하 재난관리부 신설(지난해 10월 실시) 등이 삼풍사고 이후 새롭게 정비된 건축·건설 및 안전관련 제도들이었다.

이중에는 기존의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품질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있으나 일부는 세계화, 개방화를 앞두고 오히려 불필요한 규제를 심화시킬 뿐 생산적이지 못한 부분도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아직도 건축물 자체의 안정성과 부실여부를 걱정해야만 하는 처지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말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법이나 제도가 문제이기 보다는 건축물을 생산해내는 주체들의 의식이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건축물은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정부 등의 4자가 생산주체다.

특히 아직도 건축을 얘기할 때 '노가다'라고 아무렇게나 표현하는 일제시대 식민지 국민의 의식이 자리하고 있는 한 우리네 삶의 공간의 질은 삼풍의 수준에서 크게 자유로울 수 없다.

좋은 건축물을 보고 첫마디가 '어느 건축사가 설계하고 어떤 건설업체가 지었느냐'라는 질문보다는 다짜고짜 '한평에 얼마냐'라고 묻는 건축문화의 후진성이 남아 있는 한 우리 삶의 공간은 영원히 향상되기가 어렵다. 그리고 적당히 설계하고 대강대강 시공하는 전문가 의식 결여가 아직도 존재한다면 이 역시 삼풍을 생산시키는 주범이다.

건축물이란 우리가 이 땅에 뿌리내리고 사는 한 영원히 함께할 민족적 자산이란 의식과 건축은 국민모두의 삶의 공간을 창출하는 소중한 영역이라는 가치의 인정이 없는 상태에서 부실이 사라진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누리길 바라는 것은 무리한 욕심이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건축은 '노가다'도 아니고 단순히 '평당 얼마'로 평가되는 경제적 가치외에 우리의 의식과 사상이 담긴 문화적 소산인 것이다. 서구의 눈부신 건축물과 현란한 우리 전통건축물들은 모두 이같은 수준 높은 건축문화가 자리했을 때 나타난 것들이다.

건축과 건설산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모두도 이젠 달라져야 한다. 발주자, 설계, 시공, 감리, 정부 등 모두는 각자의 전문성을 최대한 높여가고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훌륭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질 좋은 건축물을 창조해 낼 때만이 삼풍의 경험이 가치있는 교훈으로 남게되고 시장개방 등 급변하는 국제조류 속에서도 무난히 살아남는 길일 것이다.

또한 더욱 시급한 것은 이 땅의 모든 건축가와 엔지니어들에게 있어 철저한 전문가의식과 프로의식의 재정립이다. 그것은 허황된 지적 허위의식도 오만한 엘리트의 식이어서도 아님은 물론이다. 그것은 평범한 직업의식이자 건전한 시민의식을 의미한다. 삼풍사고 후 1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같은 의식의 재정립부터 점검하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일본 건설업계의 중진 간부에 의한 삼풍의 평가는 향후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강한 시사를 의미한다고 믿는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관과 민의 의식 부족이 문제가 아닌가 봅니다. 우리 일본에서도 시설물 사고가 많은 편입니다만, 특히 도쿄올림픽 이후에는 부실공사 문제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자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기술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체의 구조가 문제라는 얘깁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성장과정상 불량자재나 바다 모래를 사용하는 정도는 당연시하는 사회분위기였습니다. 올림픽을 급하게 준비하여야만하는 입장이었지요, 더욱 제조업과 사회시스템이 미비했으므로 정부의 통제도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후 공무원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법규와 규칙을 만들어 현실 가능한 목표 설정후 민간기업에 제공했습니다. (70년 초부터 정비) 여기에 공동체의 질서를 우선하는 일본사회의 교육과 요구가 맞아떨어져서 오늘의 일본이 되었다고 봅니다. 공사에 적용되는 법규는 오히려 한국이 일본보다 앞선 부분이 많습니다. 결코 법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